

“빠져린 반성... 자책” 또 고개 숙인 MB ... ‘촛불’ 꺼질까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취임 후 두 번째로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다. 지난달 2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1차 사과한 데 이어 꼭 28일 만이다.

이는 진솔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위기 국면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두 번째 ‘반성문’이 성난 민심을 다독이고 국면전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감성 화법’을 통해 국민의 이해를 구했지만 ‘쇠고기 재협상 불가’라는 기존 원칙에선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쇠고기 파문’ 등 최근 국정혼란 사태에 대한 특별기자회견을 마친 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난국 타개 분수령

이날 특별회견은 이 대통령의 쇠고기 정국 타개 3단계 구상, 즉 ‘특별회견→청와대 해신→내각 해신’ 가운데 첫 번째 단계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조만간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20일 청와대 참모진을 대폭 교체하고 내주 이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각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이 대신 최대 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

포기 가능성을 내비친 것도 정국수습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쇠고기 파동이 쉽게 가라앉을지는 미지수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쇠고기 파문’과 관련,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을 뿐, 추가협상에 대한 진전된 내용도 제시하지 못했으며, 추가적으로 수반된 국정쇄신책도 새로운 내용이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특히 야당과 촛불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여전히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광우병 대책회의뿐 아니라 통합민주당은 이날 회견에 대해 ‘쇠

고기 협상에 관해 국민의 뜻과 동떨어진 변명으로 일관한 실망스러운 회견이었다’고 정면 비판하고 나서 경색된 쇠고기 정국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더욱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등이 쇠고기 재협상과 함께 정부의 포기선언을 요구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 교육정책, 공영방송 정책, 수돗물 관리 민영화 등에 대해선 밀어붙이기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공기업 선진화, 규제 개혁, 교육제도 개선 등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꼭 해야 할 일들은 철저히 준비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호남 출신 거론 안돼 ‘탕평인사’ 의문

■ 내각·청 인사 어떻게

19일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기자회견에서 청와대와 내각 개편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중용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물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출신은 찾아보기 어려워 소위 ‘탕평 인사’에 대한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특별기자회견에서 “청와대 비서진은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대폭 개편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내각도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첫 인사에 대한 국민의 따뜻한 지지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국민의 눈높이에 모자람이 없도록 인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이른바 ‘강부자(강남판부자)내각’,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청와대’라는 비판을 수용해서 후속 인선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중용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물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출신 인사는 찾기 어려워 또 다시 호남 소외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내각에 중용될 것으로 거론되는 광주·전남지역 출신으로는 강정제 전 전남대 총장과 임상규 전 농림부장관도 등이 있지만 확실한 카드로 보기는 어렵다.

감사원장으로 김광식 대법관이 내정되긴 했지만 감사원장은 내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폭적인 인적 해신이 이뤄지는 청와대 수석 비서관 후보 가운데서도 광주·전남지역 출신은 찾아보기 어렵다.

사회정책 수석으로 김대식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거론되는 정도며 전북 출신인 김덕룡 전 의원이 대통령실장 후보로 검토되고 있는 수준이다.

지역 여론은 이 대통령의 인적쇄신안이 진정한 탕평책이 되려면 내각에서 2명, 청와대 수석진용에서 2명 정도를 광주·전남지역 출신으로 기용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30개월 이상 식탁에 오르지 않게 할것”

■ 쇠고기 협상 배수진

이명박 대통령은 난국의 직접적 원인이 된 쇠고기 문제에 대해 미국과 국내여론을 동시에 상대로 한 일종의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우선 대외적으로는 아직 양국 간 협상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결코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하겠다” “미국이 (30개월 이상 수입제한을) 받아들일 때까지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보류하고 수입을 할 수 없다”는 강한 입장을 표명했다.

동시에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민심’에 대해서도 과거 중국산 마늘 파동을 거론하며 다시 한 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미국이 30개월 이하 쇠고

기 수입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기자들과의 문답에서도 “미국이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고시를 보류하고 수입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미 양국은 기본적으로 미국 측 육류 수출업자와 한국 내 수입업자 간의 자율규제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한국 내 반입을 막는다는 전제 하에 협상을 하고 있다.

다만 미국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출 제한을 확실하게 보장해주느냐와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 자율규제를 적용할지가 쟁점으로 남아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문답 과정에서 “한국정부는 그것(자율약속)으로 믿을 수 없고 미 정부가 보장하는 제도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을 강조, 가급적 정부의 강한 개입을 피하려는 미국 측을 압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성장 우선서 물가·민생 안정으로 바뀌

■ 향후 경제정책 기조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성장 우선에서 물가·민생 안정으로 선회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제유가가 150달러를 넘으면 비상체제로 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지금은 서민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충격을 없애기 위해 물가안정, 서민안정으로 가고 있다. (장부가) 국정운영의 방침을 바꾸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성장 위주의 경제운영 계획은 물가민생 안정으로 선회하면서 대대적인 수출이 불가피하게 됐다.

환율정책이나 통화정책 등 성장과 물가안정 부문에서

정책목표가 상충할 수밖에 없는 분야의 정책수단은 물가안정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정부의 외환정책은 수출촉진을 위한 ‘고환율’ 드라이브에서 물가를 우선, 소비와 투자 등 내수 진작을 위해 정부는 최근까지도 한국은행에 정책금리 인하 압력을 가했지만 앞으로는 금리 결정에 참가할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규제완화나 감세, 추가경정예산 등 특별히 이해상충이 없는 정책들은 기업경쟁력을 활성화시키고 경제전반의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방침과 일정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야당에 대한 여론의 등원 압력은 갈수록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쇠고기 민심’ 따라 투쟁방향 결정될 듯

■ 민노총 총파업 영향 받아

이명박 대통령이 쇠고기 파문 등에 관한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지만 민노총의 파업 의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미 수습국면에 접어든 화물연대 파업의 경우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더욱 탄력을 받으면서 빠르면 이번 주말에 정상화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민노총은 총파업의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물가폭등 대책, 대운하 폐기 등 4가지 사회적 의제를 내걸고 있다. 쇠고기에 관해서는 ▲ 2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 ▲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의 완전

제거 ▲ 검역주권 확보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노총은 그러나 이 대통령이 이날 특별기자회견에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가 국민의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공공부문 개혁에 관한 한 계속 추진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고 대운하 폐기 문제도 확실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했다.

우문숙 대변인은 “쇠고기 문제에서 30개월령 이상을 수입하지 않는다는 말만 갖고는 답이 될 수 없다”면서 “이 대통령의 회견 내용이 민노총의 향후 투쟁방향에 변화를 줄 수 있는지는 질문에 “그럴 만한 내용이 못된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이런 공식적인 입장에도 이 대통령의 특별회견을 계기로 ‘쇠고기 민심’이 사그라들 경우 민노총의 파업 의지도 한풀 꺾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연합뉴스

FILA thanks festival 30% - 20% OFF

기간 : 6월 20일(금) ~ 7월 13일(일)

FILA Gold, Filative

일부 품목 제외